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기술이 소중하게 보호되어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보호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보호수칙

0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합니다.

기술보호 관리 규정 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분류·취급 방법,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02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0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04

전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
를 체결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고,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는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0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력의 퇴직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고, 서류/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정구하며, 영업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06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
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자산(기술) 중 영업비밀을 파악·등록
(극비/비밀/대외비)을 부여하고,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

07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서류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자료를 임의로 복제·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합니다

08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출입통제구역'
으로 지정·인가된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며,
카메라·스마트폰 반입을 금지시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09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개발한 기술은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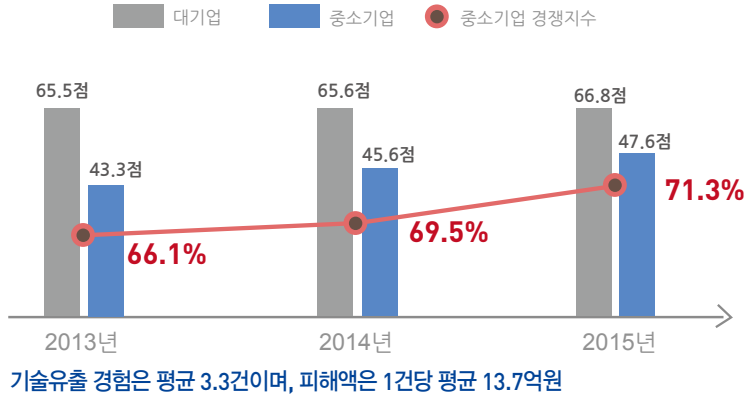
10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허가된 USB사용 및
기술자킴(보안관제)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자료를 지켜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현황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13) 43.3점 → ('14) 45.6점 → ('15)47.6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대기업 대비 71.3%수준에 불과하여 기술유출에 취약한 실정



기술유출·탈취 피해유형은 기술인력 빼가기(38.9%)가 가장 많고 경쟁사로의 기술유출(20.6%), 내부직원의 유출(17.0%), 거래관계에서의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13.2%)가 많음

◎ 기술자료 유출 경로 및 대응 실태

인력을 통한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유출의 주된 관계자는 주로 퇴직직원(75.8%)이며, 외부관계자보다는 내부인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 기술유출의 주된 이유는 관리감독이 부실(47.9%)하거나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36.7%)이 가장 많음
유출 수단 및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로 유출된 기술자료는 생산 중인 제품(38.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23.2%), 기술도입 및 이전 계획(10.3%) 등으로 나타남 내부관계자와 관련된 유출은 휴대폰 저장장치, 복사 또는 절취로 인한 비율이 높음 비기술자료의 유출빈도는 영업정보(22.3%)와 원가분석정보(10.1%)의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남
피해기업 대응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60.4%) 미조치 사유: 기술유출 입증의 어려움, 거래관계 계속 유지 등

기술유출 주체 및 방법



유출의 주체는 크게 **내부인(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외부협력업체, 경쟁업체,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음

내부인에 의한 유출

- 개인 PC 또는 업무시스템의 중요 정보나 전자 문서를 Web/Mail/메신저의 첨부형태로 유출
- 오프라인 문서의 경우 핸드폰/USB, 프린트/복사물을 불법 유출하거나 FAX를 통하여 유출



외부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공받은 영업비밀이나 자신들이 개발한 영업 비밀을 복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유출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다른 거래업체에 제공
- 외부인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스템을 해킹하고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사내에 무단 침입하여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IT자산이나 프린트/복사기를 통해 생성된 오프라인 문서를 유출
-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내에 출입한 외부인이 업무시스템의 DB 등에 접근하여 대규모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IT자산/오프라인 문서를 유출
- 시찰, 견학 등의 기회에 무단촬영, 복사, 절취 등의 방법으로 유출

경쟁사나 대기업은 핵심기술 보유자를 매수 또는 스카우트하거나 투자, 공동연구, 납품 등을 제안하며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유출



Pass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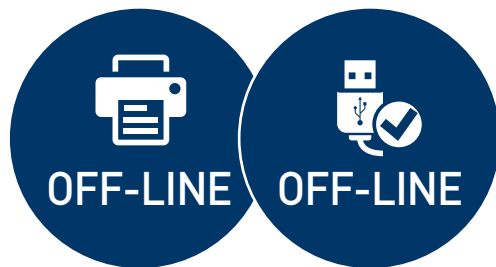
기술유출 방법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방법은 크게 **ON-LINE**과 **OFF-LINE**으로 나뉨



ON-LINE

-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 E-mail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전송, 웹 하드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이 주요 이슈



OFF-LINE

- 기업의 감시망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노트북이나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법 반출하거나, 최근에는 OFF-LINE 문서에 대한 관리나 접근권한이 미흡한 것을 이용해 프린트나 복사물의 형태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음
- USB나 플래시 메모리 등 지능형 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처할만한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에 적극적 관리가 필요

기술유출 경로

불법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로도 유출되고 있음**

- 경쟁사는 현직 임직원에게 금전적인 매수를 통한 인력 스카우트 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이용해 기술을 유출
- 첨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거래업체를 통하여 부품 및 장비를 불법적으로 유출
- 최근에는 합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전수를 이유로 핵심인력을 자사로 이동시키는 등 기술 유출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기술유출 피해 사례



◎ 인력유출 (대기업으로 유출, 경쟁 중소기업으로 유출)



대기업으로의 이직

핵심인력이 순차로 대기업으로 이직한 사례

피해회사 A의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과장 및 주임급 등 핵심인력 6명이 퇴사한 후 대기업 B로 순차 이직하여 A사의 연구조직이 붕괴되고, 영업상 비밀자료 등이 유출되어, 대기업 B사에서 A사의 거래처에 A사의 제품을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함



경쟁 중소기업으로의 이직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이용한 사례

히터 제조기술을 보유한 C사에 재직하던 甲과 乙이 퇴사 후 경쟁사인 D사로 이직한 후, C사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제품을 제조하고 C사의 고객사에게 접근하여 판매하자 C사는 甲과 乙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됨



경쟁업체 창업

퇴사하면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무단반출하고 경쟁사를 설립한 후 거래처를 탈취한 사례

건설장비업을 영위하는 피해회사 E에서 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퇴사 후 경쟁사 F를 설립하고 무단 반출한 E사의 자료를 이용해 유사품을 제작한 후 경쟁사에 납품
E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술보호를 소홀히하여 영업 비밀로 인정되지 않음

◎ 거래관계 (대기업과 거래,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거래)



대기업과의 거래

계약체결 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단 이용한 사례

중소기업 G사는 개발한 특허기술의 상품화를 위해 대기업 H사에 자료를 송부한후 H사가 유사 기술을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하자 G사가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증거불충분 등으로 모두 패소함



중소기업과의 거래

거래처가 복제품을 만들어 손해가 발생한 사례

촬영기기 제조사인 I사는 거래처인 J사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복제하여 판매한 것을 확인함

I사는 제품을 특허등록 또는 기술자료 임치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J사로 유출된 자료가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함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외주협력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스코드와 개발 산출물을 다른 경쟁사를 위해 사용한 사례

휴대폰을 제조, 판매하는 K사의 협력사인 L사가 과거 K사 용역 당시 취득한 SW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직접 휴대폰을 제작하여 판매함
L사가 K사를 고소하였고, K사 대표와 부사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손해배상이 선고됨

◎ 해외유출



사례 1 : 퇴사자가 중국인의 제안으로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고 기술지도한 사례

N사 설계팀에 근무하던 甲이 퇴사 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고, 중국인 乙로부터 복제품을 제작하여 중국에서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음
 甲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기술자료 일체와 기술을 전수하였지만 복제품 개발에 실패한 중국인 乙이 N사에 제보하여 甲에게 징역형 선고됨



사례 2 : 퇴사자가 외국업체로 이직 후 피해회사의 웹하드에 무단 접근하여 유출한 사례

TV제조사인 O사에서 근무하던 甲이 말레이시아 동종업계로 이직 후 O사 웹하드에 접속해 PDP TV 제조관련 파일과 매뉴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TV개발 업무에 사용함
 O사는 甲을 형사 고소하였고, 甲에게 영업비밀을 해외에유출한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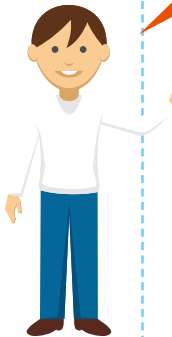
침해사례로 돌아본 대응방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창업의 주요한 동기가 경제적 사유이므로 ‘내일채움 공제’를 활용하여 경제적 보상 강화 및 애사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보유기술이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경영상의 정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공지되지 않은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술보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 ◎영업비밀로 보유할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기술자료임치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음
- ◎하나의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소송 등 여러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제일 먼저 내려진 결정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수사/재판마다 증거의 성실한 제출 및 충분한 법리 주장이 필요
-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피해회사)의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재직 및 퇴사 시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업금지약정서 체결시 ①회사의 중요한 정보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②가능한 한 대가를 지급, ③중요한 정보자산에 대해 기술보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조치로 경업금지약정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제품 납품 등의 계약체결 전 대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다가 투자나 계약체결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대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이전, 제품이 출시되면 노출이 되는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미리 해 두어야함
- ◎외주협력업체와는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제공한 자료 및 용역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이 피해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 용역수행이나 계약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 계약종료 후에는 무단반출하거나 복제한 자료의 유·무에 대한 점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회 등의 조치가 필요
- ◎퇴사자의 경우, 자료반납 뿐만 아니라 퇴사자의 회사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모두 철회 또는 삭제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TIP!

판례로 알아보는 “기술보호 노력의 의미와 정도”



1. 합리적 기술 보호노력

- 중소기업기술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어야 함
- “합리적 기술보호노력”이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기업의 규모·자금력 등에 비추어 해당 기업이 기술인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기술보호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법원이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기술보호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술보호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경제적 유용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반납 또는 폐기하지 않을 때, 업무상 배임(형사) 및 불법행위(민사)에 해당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인력관리는 기술보호의 핵심포인트

◎ 인력관리 필요성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조직 내부의 인력 관리**이며, **재직기간 중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필요

01

채용자 관리(신규, 경력)

- **(신규)** 도덕성, 범죄 및 개인파산 등의 법률적 이력, 입사동기 등 신상정보를 면밀히 검토
- **(경력)** 개인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전 회사의 퇴직 동기, 이전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영업비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동종 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02

재직자 관리

•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 입사, 교육, 부서배치, 프로젝트 투입 등의 경우에 모든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는 분쟁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의 범위 등 명시)

• 전직/경업 금지 약정

-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정보(기술, 고객, 거래처 등)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약정

* 핵심 기술인력 또는 임원에 한하여 체결 가능

- 통상 전직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이고 경업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2~3년임

판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며, 경업제한 기간이나 지역 등을 약정한 내용보다 감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92244 판결)

• 사원증 관리

- 재직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고 출입지역에 대한 차등적 제한 필요

퇴직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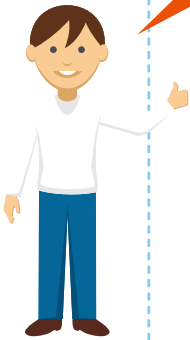


03

- 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사직서 징구
*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인력이 퇴직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퇴사자가 재직 시 작성한 각종 서약서나 프로젝트 투입 기록, 전자파일 등을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중역·보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보존

TIP!

핵심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http://www.ip-job.org>)



1. 정의·목적

-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 실현

2. 보상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확보

3. 혜택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중소기업청·미래부 지원사업 참여시 혜택 부여

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



1. 정의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2. 목적

- 중소기업 기술력과 노하우 축적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 안정적인 일터 제공
- 핵심인력의 복리 향상으로 즐거운 직장생활 가능

3.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기술거래의 유형과 유출방지 대책

◎ 계약 전 단계에서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

기술유출은 제품소개 단계 또는 계약 전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거래를 기대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상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기술을 지식재산권(특허등록)화 하거나, **영업비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 및 원본증명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함

◎ 거래유형별 유출방지 대책

① 수·위탁 계약시 유출방지 대책

계약단계	기술 유출 및 보호 관리 방안
제조설비에 대한 기술보호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제조공정이 포함된 도면이나 서류의 블랙박스화를 추진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도면상에 게재된 시험방법, 소재정보 등 개발 노하우를 삭제하고 제공 CAD/CAM 데이터는 현지 컴퓨터로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
설비의 유지, 보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부득이하게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출입지역은 한정 설비의 판매계약에 제조설비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조항을 삽입

② 합병(M&A) 계약시 유출방지 대책

계약단계	기술 유출 및 보호 관리 방안
경영전략 수립 및 M&A 전략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위탁연구 주체가 기술유출 방지전략을 이행하는지 여부 확인 실무 협의 과정에서 참석 대상자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전교육 실시 연구과제를 세분화하여 계획서만으로 전체의 기술이 확인되지 않도록 조치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계약서가 작성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전까지 기술에 대한 세부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정밀실사, 기업가치 평가 및 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중개기관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중개기관에 의해 기술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확인 후 실사 진행
협상 및 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병계약서에는 자료보존 방법과 유출의 금지, 제한에 관한 조항 삽입 계약단계에서 근로자와의 기술보호 서약서 징구 개인이 비밀을 유출한 경우 합병상대 기업의 연대책임 명시

③ 조인트벤처시 유출방지 대책

계약단계	기술 유출 및 보호 관리 방안
대상기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이 비밀유지의무의 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
의향서(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작투자할 상대방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기업에 핵심적인 기술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임의로 이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조인트벤처설립절차 진행	
최종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팀의 담당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조인트 벤처 설립 완료	

④ 라이선스 계약시 유출방지 대책

계약단계	기술 유출 및 보호 관리 방안
기술계약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술이전의 유형을 확인
계약상대방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방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를 확인 계약상대방의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기술의 사업화 역량 및 추가 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대가 지급가능 여부를 체크
계약조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상대방에게 이전할 기술의 범위, 방법을 정하여 계약범위 외 기술이전을 예방하고, 비용(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지급방법, 지급처에 대해 명시하여 분쟁예방 계약기간 내 신기술 개발 시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자를 특정하고, 특허 등의 출원, 등록절차 및 권리 유지비용의 부담에 대한 명시로 기술분쟁 예방 계약서 내 계약의 유효기간 및 변경·해지·종료 시 절차에 대해 명시 하며, 분쟁발생시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범위 및 해결방안 (조정·중재·법원)에 대해 명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목적, 경위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성 도모 계약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및 비밀유지, 반환할 정보의 내용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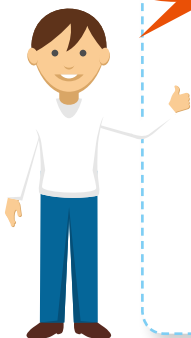
TIP!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유출 발생시 대응 절차 및 방법

기술유출 대응 프로세스(5단계)

01



유출사실 발생에 따른 보고

기술에 대한 침해 또는 유출사실을 발견한 경우, 간단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기업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보고순서 : 발견자 → 소속부서장 → 상급 부서장 → 대표이사

02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핵심기술 접촉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 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 및 수정 히스토리 조사 등

유출한 기술사용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해당기술의 개발 및 출시 등의 동향을 파악

* 의심되는 회사와 관계되는 내부 임직원 또는 부서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조사

03



추가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 실시

영업비밀 침해를 자체적 확인결과 침해가 탐지되었거나 추가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

* 내부직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 문서, 파일 등을 즉각 회수하여 추가 유출 방지

외부 직원 및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유출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접근 및 네트워크 접속 등을 차단

04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침해 현장상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물품은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비디오, 진술서 등을 신속히 확보

증거 신빙성을 위해 주체, 일시, 장소, 증거확보 경위 등도 포함해야 하고 진술서·확인서에는 본인 및 제3자의 서명도 필요(형사적 및 민사적 법적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05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조치방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법과 법적 구제방법이 있음



기술유출 대응 방법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방법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핵심기술 유출 여부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당사자 간 합의(분쟁조정)를 통해 해결 가능 함

합의는 막대한 법률비용 및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막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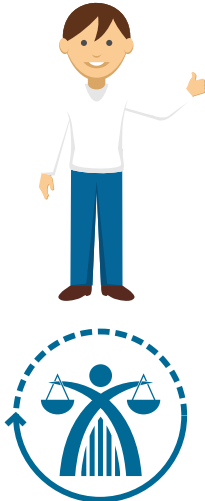


기술분쟁, '조정'하고 '중재'로 해결

- ☞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유도를 통해 재산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중재는 중재부의 중재판정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위한 조정 및 중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제공
- ☞ 조정은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중재는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내에 이루어지므로 신속·저렴·전문성 있게 분쟁을 해결

법적 구제조치

- 기술유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조치가 필요
- 영업비밀유출 사건 수사되지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신고하여 진행
- 영업비밀유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
- 증거확보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 및 피해 회사의 제한된 사람 외에는 알려서는 안 됨
- 재판은 공개가 원칙임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의 핵심 기술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유의하여야하며, 소송개시 후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신청 필요
- 기술을 유출당한 기업은 유출기술에 대한 개발 및 보유 사실에 대한 입증 필요
 -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입증 가능



《기술자료 임치제도》

- ☞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된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폐업, 파산 등을 한 경우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
- ☞ 임치의 대상은 생산방법, 설계도, 매뉴얼 등 기술상의 정보와 재무, 회계, 원가, 각종 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포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